

산업안전보건정책,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한다

- 노동부, 4월부터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70년대 4.85%였던 산업재해율이 95년에는 1%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99년부터 재해율은 0.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하고 노·사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통해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감독·점검에 맞춰 타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고 감독 인력 부족으로 점검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복귀지원이 확대된다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0년 3월 26일 개정·공포하였다.

직업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과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중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범위내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연간 18천여명에 이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를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기계로 인한 사고성 재해예방 위해 협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개 직능단체와 협무협약 및 자문위원회 발족

산업 현장의 기계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11일(목),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5개 산업기계 제조사 직능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설비나 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자는 2009년 20,609명으로, 이는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4명중 1명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 기기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1.29%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인 0.7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와 같이 매년 평균 18,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국내 산업기계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협회 등 5개 기계류 제조사 직능단체와 협약을 맺고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각 협회 1,2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세미나, 기술자료 제공,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기계기구의 안전한 설계와 제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각 협회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공단과 함께 산업기계 재해예방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맺은 5개 단체를 포함한 산업기계 관련 학계, 제조사 단체, 유관기관, 국외 인증기관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기준 제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담당한다. ☺